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

2017. 8.

목 차

I. 2018년 예산안 모습	1
1. 기본방향	1
2. 재정총량	3
3.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6
II. 지출 구조조정 실시	7
1. 양적 지출 구조조정	7
2. 질적 지출 구조조정	8
III. 투자의 중점	9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10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17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27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33
5. 인적자원 개발	40
<별첨> 분야별 자원배분	45

I. 2018년 예산안 모습

1 기본방향

① 새정부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 최우선 반영

- (일자리 중심)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中企 청년 추가 고용(2+1) 등 민간일자리 창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
- (소득주도 성장) 일하는 복지 지원, 아동수당 신설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및 생계비 경감을 통해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혁신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와 규제개선 병행 지원

②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안정적 재정건전성 관리

- (재원배분 패러다임 전환) SOC 등 물적 투자는 적정 관리하고,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해 성장동력 확충
 - (사업 조정)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지출 절감, 수요자 중심 사업구조 개편 등 양적·질적 구조조정 병행
- ※ 상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③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 (렌트 배분체계 개선)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상체계 혁신 유도
- (참여·공개) 국민 참여예산을 시범 실시하고, 수요자 맞춤형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

참 고

2018년 예산안의 틀

사람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

재정 기초

- 선제적·적극적 재정 + 강력한 재정혁신
- 새정부 정책과제 + 경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
- 일자리 창출·소득기반 확대·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 한국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
- 민간 일자리 창출
- 국민생활안전분야 공공서비스인력 확충
- 일자리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 지원

-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증대
- 세일앤리스백 등 서민 주거비 경감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
- 지역간 격차해소

투자 중점

혁신성장 동력 확충

- 4차 산업혁명 등 혁신 생태계 지원
- 경제전반으로 혁신 확산
- 규제혁신과 병행
- 혁신자본 공급

국민이 안전한 나라

-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극복
- 먹거리 안전 강화
- 재해·재난 예방
- 자주국방 역량 확보
- 통일 지원 확대

인적자원 개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투자
- 교육 희망사다리 마련
- 고등교육의 질 제고

재정 개혁

-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실시
- 렌트 배분체계 혁신
- 국민참여예산, 정보공개 등 예산의 공공성·투명성 확대

2 재정총량

- ◇ 새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미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사람 중심 투자 ⇒ 총지출은 429.0조원 [+7.1%]

-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

□ 국세수입 개선 ⇒ 총수입은 447.1조원 [+7.9%]

-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명목소득 증가 및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10.7% 증가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 등으로 4.0% 증가

< 2018년 재정운용 모습 >

	'17예산		'18예산안 (B)	(조원, %)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 총지출	400.5	410.1	429.0	28.4	7.1
▪ 예 산	274.7	280.3	295.0	20.4	7.4
▪ 기 금	125.9	129.8	133.9	8.1	6.4
◇ 총수입	414.3	423.1	447.1	32.8	7.9
▪ 예 산	268.7	277.5	294.9	26.2	9.8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5.9)	(10.7)
▪ 기 금	145.6	145.6	152.2	6.6	4.5

□ 국정과제 소요를 최대한 반영

-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178조원)에 대한 첫째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18년 18.7조원)

<주요 국정과제 반영현황>

- (아동)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18.7월)
- (청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18년 2만명), 구직촉진수당('18년 21.3만명) 등 청년층 민간취업지원
 - 중앙직 공무원 1.5만명 충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노인) 기초연금 인상('17년 20.6 → '18년 25만원/월), 노인일자리 확대('17년 22만명, 43.7만명 → '18년 27만명, 51.4만명) 등 노인소득 증대
-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18.10월)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인상('17년 9.5 → '18년 10.2만원), 치매국가책임제 등 생활비 경감

- 국정과제 외 국민생활에 필요한 추가정책과제도 선제적으로 추진
-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차년도 목표분(9.4조원) 대비 2.1조원 증가한 11.5조원 감축

< 국정과제 재원 및 지출구조조정 >



□ 강도 높은 구조조정 ⇒ 수지 및 채무는 다소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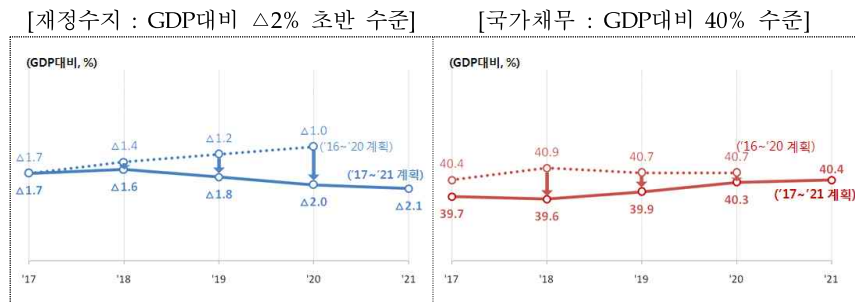
- (재정수지) GDP대비 $\Delta 1.6\%$ 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0.1\%p$ 개선
- (국가채무) GDP대비 39.6% 로 전망되며 전년보다 $\Delta 0.1\%p$ 개선

	(조원, %)		
	'17예산 (A)	'18예산안 (B)	증감 (B-A)
◇ 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28.3$ ($\Delta 1.7$)	$\Delta 28.6$ ($\Delta 1.6$)	$\Delta 0.3$ ($0.1\%p$)
◇ 국가채무 (GDP 대비 %)	669.9 (39.7) ¹⁾	708.9 (39.6)	39.0 ($\Delta 0.1\%p$)

1) 추경 확정 기준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39.6%

□ 세입기반 확충과 구조조정 시스템화 ⇒ 중기 재정건전성도 유지

- (세입기반 확충)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국세수입 확충
- (지출 구조조정) 체계적·상시적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질적 구조조정 병행



3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구 분	'17년(A)	'18안(B)	(조원)	
			증감 (B-A)	%
◆ 총지출	400.5	429.0	28.4	7.1
1. 보건·복지·노동	129.5	146.2	16.7	12.9
※ 일자리	17.1	19.2	2.1	12.4
2. 교 육	57.4	64.1	6.7	11.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	49.6	6.6	15.4
3. 문화·체육·관광	6.9	6.3	$\Delta 0.6$	$\Delta 8.2$
4. 환 경	6.9	6.8	$\Delta 0.1$	$\Delta 2.0$
5. R&D	19.5	19.6	0.1	0.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Delta 0.1$	$\Delta 0.7$
7. SOC	22.1	17.7	$\Delta 4.4$	$\Delta 20.0$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0.02	0.1
9. 국 방	40.3	43.1	2.8	6.9
10. 외교·통일	4.6	4.8	0.2	5.2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0.8	4.2
12. 일반·지방행정	63.3	69.6	6.3	10.0
※ 지방교부세	40.7	46.0	5.2	12.9

II. 지출 구조조정 실시

1 강도 높은 양적 지출 구조조정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 (원칙)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Zero-base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낭비성 지출 구조조정**

< 양적 지출 구조조정 사례 >

- [정책 전환] 그간 스톡이 축적된 SOC(도로·철도 등), 농업생산시설(수리시설 개보수 등),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 정비 등) 구조조정
- [성과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채 자체점검 결과 반영
- [집행부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소요 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 [선심성·소비성·관행적 지출] 연례적 행사비용 절감, R&D 일몰제 실시
- [외부지적 등] 유사중복 정비, 국회·감사원 지적사업 등

- (결과) 11.5조원 구조조정 및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변화

-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 및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도 구조조정 실시

< 분야별 구조조정 결과(잠정) >

분야	SOC	산업	농림	환경	R&D	문화
	△4.4조	△0.9조	△0.7조	△0.5조	△1.0조	△0.5조
분야	복지	교육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	행정
	△1.4조	△0.3조	△1.5조	△0.1조	△0.3조	△0.4조

* R&D 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과 중복 있음

- 복지·교육 분야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SOC 분야 20% 감축 및 문화·환경 분야는 감축 기조로 전환

2 질적 구조조정 및 참여예산 시범실시

- 렌트 배분체계 개선, 대학창업·ODA 융합예산 편성, 수요자 중심의 수출바우처 확대 등 **질적 구조조정 일부 추진**

< 질적 지출 구조조정 사례 >

- [렌트 배분체계 개선]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구현
* (예) 중소기업간(産-産)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36→56개 과제)
- [융합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 (예) 대학창업의 경우 창업선도대학(중기부)을 중심으로 5개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원 특화형(교육부, 24억), 과학기술 특화형(과기부, 16억) 연계
- [복지 사례관리 연계] 업무분야·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사례관리 (총 7종)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강화
- [수출 바우처 확대] 수출기업이 서비스·공급기관을 선택하는 수출 바우처 대상을 확대(2개→6개 사업)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공급자간 경쟁 촉진

-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예산을 '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 하여 6개 사업에 422억원 지원

* '17년 나라살림 아이디어(368개) 및 광화문 1번가 제안사업을 토대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7.28~8.11일, 1천명)

단계적 재정혁신 추진

1단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세제 개편 - 11.5조원 지출 구조조정 및 국민참여예산 시범도입 -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중심의 '17년 세법개정안
2단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 '19년 예산안부터 반영
3단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민주화와 재정분권의 정착 및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

Ⅲ. 투자의 중점

일자리 창출	1. 민간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여성 경력단절 예방
	2. 공공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3. 일자리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인상 반영 일가정 양립 지원
	4.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촉진수당 등 실업안전망 강화 유연 일자리 및 직업교육 혁신
소득 주도 성장	1.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2. 서민 생계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에너지 바우처 지원
	3. 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성장·재도전 지원 전통시장 지원 확대
	4. 지역 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사업 지원 농어촌 소득·경영 안정
혁신 성장	1.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개발 네트워크 중심 지원체계 전환
	2. 경제 전반으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리에이티브 랩 설치·확대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3. 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신비즈니스 규제개선 실증연구
	4. 혁신자본 공급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형 금융자본·혁신창업 확대 혁신 인적자본 확충
안전한 국가	1. 자주국방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전력 투자 확대 병 봉급 인상
	2. 생활안전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대응, 가습기 피해 지원 먹거리 안전 강화
	3. 평화통일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경협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인적 자원 개발	1. 저출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주거 → 임신·출산 지원 육아·돌봄 지원
	2.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누리과정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해외유학·연수 지원
	3. 고등교육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구 확대 지방대학 지역거점 역할 강화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 현황

- (실업) 연간 실업률 3년간, 청년 실업률 4년간 지속 상승하는 등 실업문제 심각

*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보조지표3(%):
(‘15.7) 22.6 → (‘16.7) 21.6 → (‘17.7) 22.6

- (이중구조)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이중 구조로 인해 일자리간 임금·복지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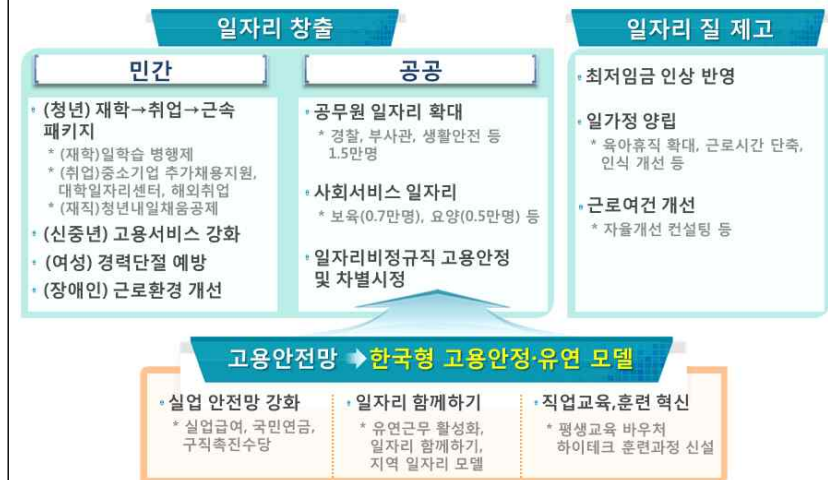
<실업률 추이(%)>



<대중소기업 고용상황(만원, %)>



◇ 재정지원 방향



□ '18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7년	'18년(안)
청년	중소기업 추가채용	0.3만명	2.0만명
	청년구직촉진수당	9.5만명	21.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600만원 5.5만명(추경)	1,600만원 6만명
	일학습 병행제	9,500개	12,500개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10개	소형 40개
	공무원 17.4만명 확대	-	+3.0만명 (국비 +1.5만명)
신증년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	20천명	25천명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4.5천명	7.0천명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18만원(분기당)	24만원(분기당)
여성	새일센터 확충	155개소	160개소
	여성과학기술인 공동연구 지원	310명	414명
	육아휴직 확대	첫3개월 2배(추경) 10.1만명	첫 3개월 2배 10.6만명
	아빠의 달 확대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200만원)	모든아이 월200만원
	10 to 4 더불어돌봄 확대	통상임금 60% 한도(4천명)	통상임금 80% 한도(5천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중증남성)	월 40만원	월 50만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확대	1,000명 6,654점	1,200명 7,654점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차별 시정
구직자	실업급여 확대	5.3조원	6.2조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30만명	32.6만명
	평생교육바우처	-	연간 46만원

(1) 민간 일자리 창출

① 청년 : 재학→취업 → 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

○ [재학단계] 일학습 병행제 확대로 조기입직 유도

-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 3,000개 확대(9,500→12,500개)

○ [취업단계] 취업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이 진출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① (취업 지원) 진로 상담, 취·창업 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확대(10→40개)

② (중소기업 추가채용)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정규직 채용시 한명분 임금지원(3년간 연 2천만원 한도)

- '18년 신규 2만명 지원하여 6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③ (해외 취업)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사다리 구축

-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12명), 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등 해외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

○ [재직단계] 청년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 2년간 적립금: ('17년) 1,200 → ('17추경) 1,600 → ('18안) 1,600만원,
지원대상: ('17년) 5 → ('17추경) +0.5 → ('18안) 6만명

② 신중년 : 고용서비스 강화로 재취업 촉진

- '재직 → 전직 · 재취업 → 은퇴' 단계별 취업 지원
 - (재직)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 확대 (20→25천명)
 - (전직 · 재취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문 컨설턴트 배치(36명),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 · 재취업 연계 지원
 - (은퇴후) 사회적기업 · 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4.5→7천명)
-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연장('17 일몰 → '20년까지) 및 단가 인상(분기당 18 → 24원)

③ 여성 : 경력단절 예방

- (재취업 지원) 새일센터 5개소 확충(155 → 160개소)하고, 취업 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50개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출산 · 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신규, 20명) 및 복귀 R&D 지원*
 - * 연구소·기업 등과 공동연구 지원 확대(310→414명, 최대 3년)
- (발명창업 지원) 경단여성에 대해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50→70회) 하고, 생활발명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 출원 등 지원(13→15억원)

④ 장애인 : 근로환경 개선

- 의무고용율(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확대(중증남성 월 40→50만원)
- 장애인 근로지원인(+200명), 보조공학기기(+1,000점) 등 확대

[2] 공공 일자리 확대

① 공무원 일자리 확대

- 5년간 공무원 17.4만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18년 국민생활 · 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5만명 증원(인건비 0.4조원)
 - * '18년도 증원 계획 총 3만명(중앙직 1.5만명, 지방직 1.5만명)
 - * 지방직 1.5만명은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지자체가 증원
- (경찰) 파출소 · 지구대 순찰인력 중심 3.5천명 증원
- (부서관) 軍구조개편, 첨단장비 운용 등 연계하여 4천명 증원
- (생활 · 안전)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 · 화학 안전, 세관 · 출입국 관리 등 생활 · 안전 밀접분야 6.8천명 증원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보육, 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 (보육) 국공립 ·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0.7만명 증원
 - (요양) 치매안심센터 · 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 0.5만명 증원

③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 (고용안정)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7.20일 발표)'에 의해 현재 기관별로 실태파악 및 전환작업 진행중
- (차별시정)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해 최저임금, 명절 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을 시정

[3] 일자리 질 제고

① 최저임금 인상 반영

- **최저임금 인상**(16.4%)에 맞추어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 인상 등 지원

②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급여 2배확대 지속 유지(10.1→10.6만명)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18.下)
* (현행)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 (개선) 모두 200만원
-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 지원 인상*
* 통상임금의 80%(기존 60%)를 한도로 단축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원
- **(인식 개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리자 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 강화('18년 20억원)

③ 근로여건 개선

- **(자율개선 지원)** 임금체계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개선 유도
* ('17) 992개 기업 → ('18안) 1,050개 기업에 컨설팅 제공(9주)
- **(건강 관리)** 소규모 작업장에서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확대(121→392억)
- **(위험요인 시설 개선)** 소규모 건설현장(20억원 미만)의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확대(647→685억)

<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

① 실업 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실업급여(5.3→6.2조) 확대
- **(국민연금)**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확대(30→32.6만명)
* 실업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1년)
- **(구직촉진수당)**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본격 지원('17추경 9.5 → '18안 21.3만명)

② 유연 일자리 확산

- **(유연근무 활성화)**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3,500명),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14→20억)
-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자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17년 2,100 → '18안 4,459명)
- **(지역일자리 모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일자리) 발굴·확산을 위해 컨설팅 지원 확대
* ('17 추경) 3개 지역 → ('18안) 8개 지역

③ 직업교육·훈련 혁신

- **(평생교육)** 저소득층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하여 1만명 대상 연간 46만원 지원(신규, 54억원)
- **(직업훈련)** 고학력 구직자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 내 하이테크 훈련과정 신설(1년 과정, 27억)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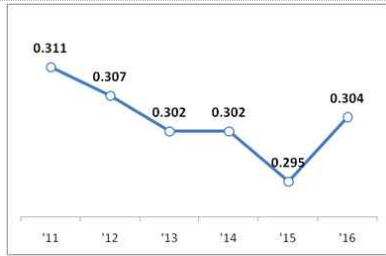
◇ 현황

- (소득불평등) 1~2분위의 소득이 감소하고, '11년 이후 개선추세 이던 불평등지수가 '16년 악화되는 등 양극화도 심화
 - 낮은 복지지출규모* 등으로 사후적 격차 완화 기능도 미흡
 - *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GDP대비, %, '16년): (한국) 10.4, (OECD 평균) 21.0
- (기업소득 집중)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기업에 귀속됨에 따라 가계-기업간 소득격차가 확대*
 - * '00~'16년간 기업소득 255% 증가, 가계소득 138% 증가

<분위별 소득증가율(%,'16)>



<지니계수>



◇ 재정지원 방향



□ '18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7년	'18년(안)
저소득층	기초생보 급여 현실화	주거 +2.5% 교육 +2.3%	주거 +4.8% 교육 +36.1%
	청년 희망키움통장 (3년후 1,500만원 수준 적립)	-	5,000명 지원
	에너지바우처 인상	9.5만원	10.2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모든 질환
아동	0~5세 아동, 아동수당 지급	-	월 10만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6~59개월	미취학 아동 · 초등학교생
노인	기초연금 인상	20.6만원	25.0만원
	노인일자리 확대	43.7만명	51.4만명
장애인	장애인 연금 인상	20.6만원	25.0만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1.5만명	1.6만명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3.5%	기본 5%
	참전·무공수당 인상	(참전) 22만원 (무공) 30만원	(참전) 30만원 (무공) 38만원
	독립 유공자 후손생활금	-	33.5~46.8만원
소상공인·전통시장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2년간 보험료의 30%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30개	43개
농어민	쌀 생산조정제 지원	-	340만원/ha
	밭고정 직불금 단가인상	45만원/ha	50만원/ha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 53개	농작물 57개

[1]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국민 기본생활 보장

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18.7월, 1.1조원)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18.4월)
 - * (지원대상) 498 → 517만명(+19만명), (예산) 8.1 → 9.8조원(+1.7조원)

②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 현실화

-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4.1만가구 추가 보호)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54만가구 추가 보호)
- 주거*·교육**급여 현실화를 위해 인상률 대폭 확대
 - *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인상률: ('17) +2.5% → ('18안) 평균 +4.8%(2.9~6.6%)
 - ** 교육급여 인상률: ('17) +2.3% → ('18안) +36.1% (중고생 기준)

③ 사회보험 안전망 확충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대상(155→205만명) 확대
-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산재인정에 따른 수혜자 확대(4.4조 → 5.0조) 및 요양종결 후 지원 강화로 보장성 강화
-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 한시로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10%) 및 수수료(50%) 지원

취약계층 소득 지원 및 보훈보상 확대

① 근로빈곤층 자활·자립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 대상 확대(43.7→51.4만명) 및 단가 인상(22→27만원)
- 자활사업 인원 확대(4.5→4.65만명) 및 단가 인상(93.6→101.9만원)
-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5,000명)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신규 3.1→3.7만명)
 - * (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 지원 30만원 → (3년 후) 1,500만원 수준

②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일자리 확대

- 장애인연금 인상(월 20.6→25만원) 및 지원대상 확대(35.2→35.5만명)
- 장애인일자리 대상 확대(1.5→1.6만명) 및 단가 인상(135→157만원)
-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 지정(10개소 장비비 지원),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설치(3개소)를 통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신규, 9억)

③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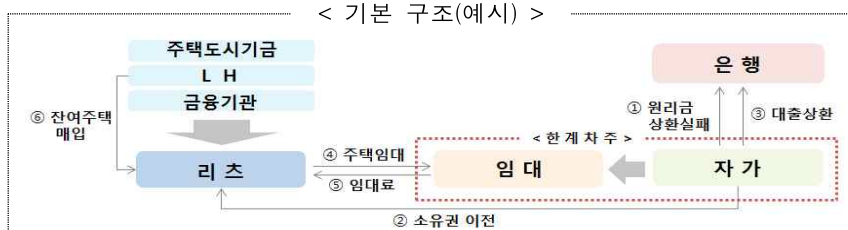
- (보상금)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 인상 및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 (참전유공자) 참전·무공수당 월 8만원 인상(22 → 30, 28~30 → 36~38만원), 의료비 감면율 60 → 90%로 확대
- (독립유공자) 생계곤란 후손 생활지원금(335천원~468천원) 신규 지원 및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 50% 인상(155~105→233~158만원)

[2] 시민 생활비 경감

① 세일앤리스백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

-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 (Sales & leaseback)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0.1조원)

* 주택기금 1,000억원 출자 → '18년 최대 1천호 매입



- 영구·국민임대 등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지원을 대폭 확대 ('17년 10.6 → '18년 13.1조원)하여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영구임대] ('17)0.2 → ('18년)0.5만호 [국민임대] ('17)0.7 → ('18년)1.9만호

② 노인·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대상 독감예방접종 지원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초등학교 신규 지원, 354억)
- 전국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 지원(188(추경)→2,135억), 치매 요양시설 확충(192개소, 977억) 등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 저소득층 대상 과도한 1회 의료비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178→357억)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0.4조원)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

③ 아이·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상향 조정(+5%p) 및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600시간)
- (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22.5→24만명)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65→69천명) 및 바우처 급여 인상(시간당 9,240→10,760원)

④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 (54 → 60만명)하고, 단가 인상(9.5 → 10.2만원)
- 저소득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창호공사 비용 지원 확대(1.5→2백만원)

⑤ 가격안정 유도 등을 통한 생활비 절감

- (교통비) 대중교통 낙후지역(농촌, 시·군 등 160개 지역)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 지원(9→80억원)
- (농축산물) 농산물 생산안정제 품목·물량 확대*로 채소류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고기넷) 구축(신규, 8억)
* (품목) 배추·무·마늘·양파 + 고추 추가 (물량) 생산량의 8% → 10%
- (통신비)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신규, 5억)하여 가계 통신비 절감 유도

[3] 소상공인 지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평균 추가 임금부담 12만원,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
 - *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으로 지원대상 약 300만명 예상

② 소상공인 성장·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을 확대(244→308억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부실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200억원)
 -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대출자금 운용계획 점검, 효과적 자금활용 방안 상담 등
-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13억)
 - *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 국비 지원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 지원을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 및 **특화·비생계형 업종 전환** 지원 강화
 - *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 ('17) 75 → ('18안) 85억원
 - 재창업패키지(특화·비생계형업종 전환 지원) : ('17) 25 → ('18안) 30억원

③ 상생협력 지원

-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전제로** 상권활성화 지원*(‘18안, 60억원)
 - *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상권에 대해 5년간 80억원 지원(국비 50%)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직권조사** 지원(신규, 1억원)
- **본사-대리점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대리점거래 계약서 제정·배포(신규, 2억원)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인프라 확산**과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이의배분제*** 도입을 위한 **저변확대** 추진(신규, 6억원)
 - * 예시)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하여 달성한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

④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

- **전통시장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 집중 지원
 -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을 **확대**(‘17, 30개 → ‘18안, 43개)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1.5만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 확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신규, 85억원)
 - * 화재 발생시 소방서·상인에게 자동으로 통보
-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 확대**(100 → 225명)

[4] 지역 균형 발전

①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전국에 신규 도시재생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낙후된 도시기능 재활성화
 - 도로,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함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0.1→0.5조원)
 - 재생지역 내 민간참여 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 마중물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확대
- * 복합개발형 출·용자(+0.3조원), 소규모주거정비사업(+0.5조원) 등

② 지역경제 활성화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교통망* 구축
 - * 남북도로 1·2단계, 동서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신항 등
 - 남북도로 2단계(설계비 192억원), 새만금 수목원(설계비 17억원) 신규 반영 등 SOC 재정지원 대폭 확대(1,488 → 2,589억원)
-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여객 부두, 선박 접안시설 등 소규모 항만기반시설 신규 착공 확대(5건, 186 → 18건, 425억원)
- 산단 진입도로 지원(신규 10개소, 28억)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 기반시설 지속 확충
- '18년 하반기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개통(1,427억) 등 교통 인프라 준공소요 지원

③ 농산어촌 지원 확대

- 영농 정착지원 지원 등을 통해 귀농·귀어·귀산촌 지원
 -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급으로 안정적 영농·영어 정착 지원(신규 97억원, 1,600명)
 - 청년농, 귀농인 등에 대해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3,343→3,783억원)
 - 쌀 생산조정제 시행,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
 -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일정 소득을 지원(평균 340만원/ha)하여 쌀 수급균형 및 농가 생활안정 지원
 - 한·중 FTA에 따른 발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고정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

* 밭고정:45→50만원/ha, 조건불리:(농지)55→60만원/ha (수산)55→60만원/가구
 -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663→923억원)
- * 농작물 53 → 57개, 수산물 24 → 27개

④ 지방재정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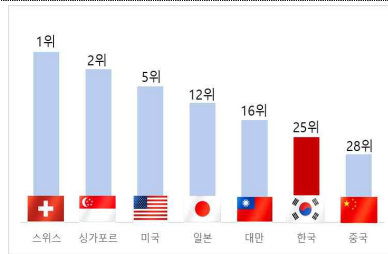
-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이 대폭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충 지원
 - * 지방교부세(조원) : ('17) 40.7 → ('18안) 46.0 (+5.2조원, +1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7) 42.9 → ('18안) 49.6 (+6.6조원, +15.4%)
 - '18년 지방재정 증가분은 예산 증가분(+28.4조원)의 약 42%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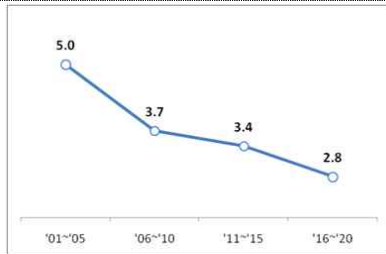
◇ 현황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고(70~80%), 인프라, 노동유연성 등 대응역량은 세계 25위로 평가
- (잠재성장률) 추격형 성장의 한계 봉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잠재성장률 저하

<4차산업혁명 대응역량>



<잠재성장률(%)>



◇ 재정지원 방향

혁신 생태계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활용
 - * 테스트베드 및 공용플랫폼 구축
- 네트워크 중심 지원체계
- 스마트공장 2,100개 보급, 용자 도입

경제 전반으로 확산

- (창업)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 (성장거점) 혁신클러스터 조성
- (사회적기업) 창업·판로·금융지원

규제 혁신

-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 * 의료정보 공유, 데이터프리존 지정
- 규제개선 실증연구, 제도개선 지원
- 버스·와이파이,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

혁신자본 공급확대

- (자본 확충) 혁신형 금융자본 지원
 - *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전패키지 확대
- (인적자본) 4차산업혁명 혁신형 인재양성
 - * SW교육, K-MOOC 콘텐츠 확대

□ '18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7년	'18년(안)
혁신 생태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0.6조원	0.7조원
	테스트베드 구축 등 융합기술 개발	0.5조원	0.7조원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개발	-	5억원
	産-産 공동 연구개발	36개	56개
	스마트공장 보급	438억원	640억원
혁신성장 거점구축	크리에이티브 랩	-	일반랩 70개 전문랩 5개
	혁신 클러스터 조성	-	200억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500팀	800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100억원
규제 개선	데이터프리존 지정	-	10억원
	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센터	-	10억원
	버스 와이파이 지원	-	4,200대
	시도관광지 와이파이 설치	166개소	585개소
혁신자본 공급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	1,800억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100억원	150억원
	사내창업 및 분사	-	100개
	학교박 SW 교실	300개	600개
	K-MOOC 콘텐츠 확대	300개	500개

[1] 제조업 · 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① 4차 산업혁명 지원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1.2→1.5조)
 -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 ICBM, 지능형 센서·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0.6→0.7조원)
 -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 의료, 자율자행차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및 **공용플랫폼 구축** 등 지원(0.5→0.7조원)
 - *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정밀의료 암진단 치료법 임상시험 등
- **스마트홈·지능형CCTV**를 복지시설·어린이집 등에 **시범 적용**하는 실증사업 확대(50→97억원) 등 **상용화 지원**

② 네트워크 중심 지원체계 전환

- **혁신형 생산·유통·성과 공유**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기업 지원에서 **네트워크·생태계** 중심으로 지원체계 전환
 - **(판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신규, 5억원), **원부자재 공동 구매**(신규, 15억원)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 지원 강화
 - **(R&D)**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산 협력체**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72→147억원)

③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스마트공장 보급 등으로 **제조-ICT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
 - **(보급·확산)** 스마트 공장 **2,100개 보급 지원**(438→640억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등을 위한 **융자** 도입(신규, 3,300억원)
 - * 보급 실적 및 목표: ('17년까지) 5,400개 → ('18년) 2,100개 → ('22년까지) 2만개
 - **(기술개발)** 제조업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신규, 40억원) 및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운영·설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15→25억)

[2]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①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으로 설치·확대('18년 349억원)
 - **상상구현터(일반랩)** 70개, **창업연결터(전문랩)** 5개를 구축하고, 메이커 전문 **인력양성** 및 **창의적 문화활동** 등을 지원

② 혁신성장 거점 구축

-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 조성**(신규, 200억)
- 공공기관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하여 **R&D과제 수행** 및 **개방형 혁신 연구실*** 구축(78 → 141억)

* 시제품·디자인 팩토리,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장비, 창업·생산 공간 등

③ 사회적기업 지원

- **(창업)**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500→800팀) 및 **경영 컨설팅**(130→140개소) 확대
 - * 창업공간, 창업비용, 창업교육·컨설팅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
- **(판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정보 제공, 유통·마케팅, 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12억)
- **(금융)**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모태펀드 신규 조성**(100억)

[3]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

①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 국가보유 32만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토록 개방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 의료정보*** 등 제공(199 → 415억원)
 - * (의료정보) 개인별 건강검진·진료내역 등 통합조회 서비스
(건강정보) 한국인 맞춤형 건강지수 개발 및 건강정보 제공서비스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신규 10억원)하여 빅데이터 발굴·활용 지원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주행데이터를 수집·분석,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신규, 10억원)

② 규제 개선 지원

- **제조서비스 융합 기반 新비즈니스의 안전성·시장성 검증**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와 이를 통한 제도개선 지원(신규, 14억원)
 - * 제조+서비스 융합 산업의 ①실증기획, ②실증, ③최적화 R&D, ④사업화 제도개선을 통해 성공적 시장진입을 지원

③ 공간적 장벽 완화

- **버스 와이파이 지원**(신규, 4,200대) 및 전국 시·도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585개소)를 통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4]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① 혁신자본 확대

- **혁신형 금융자본** 지원을 확대하고, 재기지원 및 사내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혁신 창업 활성화**
 -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확대**(1,500→1,800억원)
 -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진 재창업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지원을 위해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100→150억원)
 -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지원(신규, 10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활성화

② 혁신 인적자본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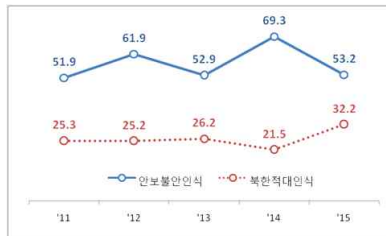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형 인재 양성 강화**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中企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306→339억) 및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800→1,200명) 확대
 -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일자리모델**(광주형 일자리) **발굴 컨설팅 지원**(3→8개 지역) 등 **한국형 유연 일자리를 확산**
 - 교대 SW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능력을 제고**(신규, 26억)하고, **학교밖 SW교실 확대**(300→600개)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內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 확대**(35→80개)하는 등 실용강의 강화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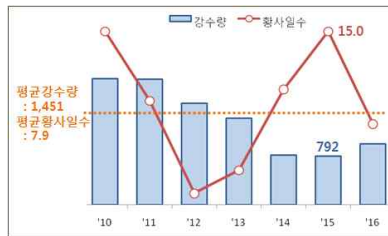
◇ 현황

- **(북한리스크)** 최근 북핵 등 대북리스크 확대 등으로 안보관련 불안감 확대
- **(환경문제)** 가뭄·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와 AI·구제역 등 가축방역문제 연례적으로 반복

<안보관련 인식(%)>



<강수량 및 황사일수>



◇ 재정지원 방향

자주국방	안전투자	평화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분야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비 증가율 6.9% * 무기체계 집중투자 북핵·미사일대비 핵심전력 투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ll-Chain, KAMD 조기구축 * 스텔스기(F-35A) 최초 인수 군장병 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봉급 인상(21.6→40.6만원) *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전기차 지원 확대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습기 피해지원 * 재발방지 지원 먹거리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등 가축질병 예방 * 먹는물 불안 해소 등 재난재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대응 * 교통·해양·감염병 등 대응 테러대비 치안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경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신경제지도 인도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행사 * 유전자검사 지원강화

□ '18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7년	'18년(안)
국방	국방예산 증가율	4.0%	6.9%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4.8%	10.5%
	Kill Chain, KAMD	21,359억원	22,565억원
	병 봉급 인상	21.6만원/월	40.6만원/월
	동원훈련 보상비	1.0만원	1.5만원
환경위해	노후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6만대 324대	12만대 6,395대
	전기차 확대	1.4만대	2만대
	가습기 피해자 보건센터	1개소	4개소
먹거리 안전	공동방제단 확대운영	450개소	540개소
	CCTV 등 방역인프라	-	2,570개소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201	233억원
	다소비식품 유해성분 조사	-	11억원
재해·재난	가뭄 대비 수계연결	-	아산·금광·마둔 아산·삼교·대호호
	버스·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	171억원
	대테러 장비 보강	3억원	174억원
남북경협	경협기반 확대	1,389억원	2,480억원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34억원	84억원
	유전자 검사	2억원	11억원

[1] 자주국방 역량 강화

□ 국방분야 투자 확대

- (국방비 확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 대폭확대
 - 국방비 증가율*은 6.9%로, '09년 이후 최고 수준
 - * 국방예산증가율(%) : 참여정부 (8.9), MB 정부 (5.2), 박근혜 정부 (4.1)
- (무기체계 투자확대) 확대된 국방비로 무기체계 집중투자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0.5%로 '09년 이후 최고 수준,
 -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참여정부 (13.0) MB 정부 (5.7), 박근혜 정부 (4.8)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 (미사일방어)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 적극 지원(21,359→22,565억원)
 - *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대량 응징·보복
- (대북억제)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 인수 등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 및 북한무인기 침투대비 방공전력 강화
 - * 무인기 탐지·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구축(신규)

□ 군 장병 생활여건 및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 (군 장병) 병 봉급·급식비 인상 등으로 장병 복지 향상
 - 병 봉급을 약 2배 인상(병장기준, 21.6 → 40.6만원) 하고, 급식비 단가인상(7,481→7,855원) 및 민간조리원 증원(1,841→1,903명)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1.0→1.5만원) 및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 세탁실 설치 확대로 훈련시설 여건 개선

[2]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

① 환경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미세먼지 대응

- (대기질 개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차 보급 지원 확대
 -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6→12만대), 건설기계·대형 화물차 저감장치 부착(324→6,395대) 등 지원
 - 전기차(1.4→2만대), 전기이륜차(0.13→0.5만대) 보급 지원 확대 및 전기 급속충전기(530→1,070기) 확충
- (환경 취약계층 보호) 매연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추경 800→1,800대)
- (생활 환경 개선) 도로 청소차 보급(111→137대), CNG버스 교체 지원(700→2,064대) 등 확대
- (예보 정확도 제고)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확충(2→13개)하고, 종합대기측정소(1개)·집중측정소(2개) 신규 운영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체계 선진화

- (가습기 피해지원)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신규 정부출연(예비비 100억원) 및 피해자 보건센터 지정 확대(1→4개소)
 - * 기업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 출연 계획
- (재발방지 강화)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시행기반 구축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18년 183억원)
 - * 추가 1개소는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조기구축('18년 증축비용 반영)

② 먹거리 안전 강화

농수산물 안전 조사

-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 실시*,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201→233억)
 - *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잔류농약검사 수행(연 1회)
-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지원 확대(4개→10개 시도) 및 패류 가공시설 현대화(공동 10개소)
- 다소비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177품목)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중금속·곰팡이 등 유해성분 조사(신규, 11억)

AI 등 가축질병 예방

-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사시설 현대화로 밀집·밀식사육 개선
 -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 실시(1개 지역, 90억)
 - 가금농장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18년 2,570개소) 및 농가소독 강화를 위한 공동방제단 확대 운영(450 → 540개반)
-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 지원(신규, 18억)
-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및 축산차량 관제센터 설치(신규, 8억)
 - * (등록) 56,900 → 추가 +93,000대 (예산) 17 → 31억

취약계층 먹는 물 불안 해소

- 농어촌 음용지하수에 대해 맞춤형 정수장치(신규 700가구), 관정 개선(신규 100건), 마을공용관정 개발(매년 5개소) 등 지원

③ 재해·재난 예방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 (가뭄) 경기 남부·충남 서북부 수계연결*, 전남 서해안 가뭄 예방 등 상습피해지역 항구적 대책 마련
 - *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 및 아산-삼교-대호호 수계연결
- (홍수·태풍) 침수·붕괴 위험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3,587→3,736억) 및 방파제 보수보강 등 항만시설 보강(341→874억)

사고·재난 대응

- (졸음운전)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신규, 171억원)하여 대형 교통사고 방지
 - * (기존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원, (신규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
- (해양사고)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확대, 목포·군산 VTS 확충(설계비 10억원) 등 해양오염·인명사고 대응능력 강화
 - * 현대화 펀드: ('17)250 → ('18)300억원, 이차보전: ('17)76 → ('18)86억원
- (감염병 대응) 24시간 정보수집·감시, 신고·접수, 지휘통제 등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긴급상황센터 건립

④ 테러대비 및 치안강화

- (테러대비) 도시지역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 보강(3→174억원)
- (치안 강화) 범죄 수사 및 소방현장 대응역량 강화
 - (경찰)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4대), 사이버수사 장비 확충(13→39억)
 - (소방) 중앙119 구조본부 상황실 보강(6억), 헬기 시뮬레이션 센터 신축(7억)

[3] 평화통일 기반 구축

① 남북경협 지원

-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을 통한 경제통일 기반 구축
 - * 동해권(에너지, 광물), 서해권(철도 등 물류), DMZ권(관광) 중심 발전 계획
 - ** 경협기반(무상) 세부사업: ('17) 1,389억 → ('18안) 2,480억원
- (동해권) 남·북·러 가스관 연결 및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
- (서해권)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수도권-개성-평양-신의주-단동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경제협력벨트 구축
- (DMZ권) DMZ지역을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②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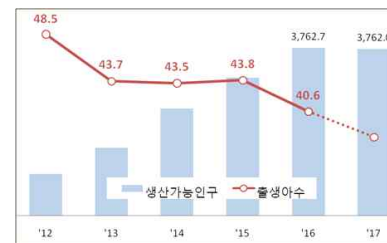
- 이산가족 교류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 지속
 - (상봉 행사)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면상봉 행사 예산을 과거 年 최다 개최 수준(3회) 편성
 - *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7) 34억 → ('18안) 84억원
 - (유전자 검사) 부자 관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사 지원
 - * ('17)2억(상염색체) → ('18안)11억원(상염색체,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 검사)

5 인적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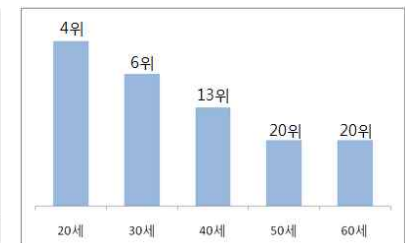
◇ 현황

- (저출산) '17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문제 심각
- (생산성) 중·고령층의 생산성 저하, 여성 등 특정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 등 인적자본의 활용도가 낮음
 - * 고용률('17.6월 기준, %): (남성) 71.7, (여성) 51.5

<생산가능인구 및 출생아수(만명)>



<연령별 생산성 순위>



◇ 재정지원 방향

저출산 극복	교육의 희망사다리	고등교육 질 제고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공공임대주택 * 전세·구입 우대대출 * 임신·출산 지원 * 분만취약지, 고위험 신생아 지원 등 * 육아·돌봄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유아·초중등 교육 * 누리과정 지원 확대 등 * 고등교육 * 등록금 부담 경감 * 저소득층 해외유학 지원 등 (드림, 파란장학금) * 평생 교육 * 평생교육바우처 등	* 기초연구 확대 *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예산 확대 * 지방대학 지역거점 역할 강화 * 거점형 국립대 육성 * 지역우수인재 양성 지원 * 대학창업 활성화 * 대학창업펀드 투자규모 확대 등

□ '18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7년	'18년(안)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만호	3만호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	-	한도 +0.3억원 금리 0.3% 우대
산모·신생아	분만산부인과 신설·전환	-	+2개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13개소	17개소
영·유아	한부모가족양육비	12세 이하	+1만원 13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설치	180개소 150개소	450개소 15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66개소	113개소
	시간제 보육시설	380개소	443개소
	누리과정 국고지원	0.9조원	2.1조원
초·중·고교생	소외계층 영재 학교단계별 맞춤형 지원	-	510명
	저소득층 고교생 해외대학 진학 지원	20명 5만달러	50명 6만달러
대학생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	-	800명
	대학원 국비유학	10명	20명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 확대	1.3조원	1.5조원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100억원	600억원
	지역발전·고용 연계 지방국립대 육성	110억원	400억원
취업준비생 직장인	대학창업펀드 확대	120억원	150억원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	-	19억원
	단기실용교육과정 개설	-	26억원

[1] 저출산 극복 지원

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신혼부부 임대주택)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2만 → 3만호)

* '18(안) 3만호(준공기준) : 건설임대 1.8만호, 매입임대 0.5만호, 전세임대 0.7만호

-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 대출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 신설

* (예)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인상, 금리 최대 30bp 우대 등

② 임신·출산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1개소) 및 기존 외래산부인과와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지원(1개소)

-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 고위험산모 산전관리, 신생아와 통합 치료를 위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13→17개소)

③ 육아·돌봄 지원

- (양육비용 경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를 월 1만원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12→13세 이하로 상향

-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 및 돌봄지원사업 투자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 확충

▪ 공동육아나눔터(66→113개소), 시간제 보육시설(380→443개소), 방과후 아카데미(250→260개소)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2]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① 유아·초중등 교육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17, 0.9조 → '18안, 2.1조원)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소외계층 영재 대상(초4~고3) 어린이가 경제적 이유로 영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학교급별 단계적 맞춤형 지원(신규, 510명)

② 고등교육

-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
 - * 실질적 반값 등록금 대상 : ('17년 이전) 소득 3분위 → ('18년) 4분위
- 저소득층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예비대학생 ~ 대학원생 대상)
 - (드림장학금) 저소득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 강화
 - * 신규 선발: ('17) 20명 → ('18안) 50명, 지원단가: ('17) 5만 → ('18안) 6만불
 - (파란 사다리)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기회 제공(신규, 800명)
 - (대학원 국비유학)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선발인원 확대(10→20명)

③ 평생·직업 교육

-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비대상자를 위한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신규, 19억원)
- 산업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Nano-Degree)을 개설하여 구직자·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신규, 26억)
 - * (구직자) 취업에 가산점 부여 (재직자) 승진시 활용

[3] 고등교육 질 제고

① 기초연구(R&D) 확대

-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17년 1.3→'18년 1.5조원)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도전적 연구 지원
 - * 개인기초연구(과기부/교육부) : ('17) 1.0 → 1.2조원
 - * 집단연구(과기부) : ('17) 1,683 → 1,988억원

② 국립대학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

- 국립대학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210 → 1,000억)
 - 9개 지방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100 → 600억)
 - 그 외 국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110 → 400억)
-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통한 우수인재 공동양성(신규, 50억)

③ 대학 창업 활성화

- 대학 내 구성원 대상 대학창업펀드 확대(120 → 150억)
- 부처간 융합예산으로 창업선도대학 중 5개교를 선정, 대학원 특화형 및 과학기술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
 - * (과학기술특화)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도록 후속 R&D 지원(신규, 16억)
 - * (대학원특화) 대학내 창업전공 융합 교육과정 등 운영지원(신규, 24억)

1. 보건·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RGD 분야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수산·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
- ◇ 주거·의료비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 지원
-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 확충

- (노인·장애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도 확대하여 소득 기반을 확충
 - * 노인일자리: 43.7→51.4만개, 월 22→27만원(공익형 기준)
 - * 장애인일자리: 1.6→1.7만개, 월 135→157만원(일반형 기준)
- (기초수급자) 노인·장애인, 주거급여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자활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
 - * ('17.11) 수급자·부양의무자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 기준 적용 제외 ('18.10)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일자리 수) 4.5→4.65만개, (단가) 월 93.6→101.9만원(시장진입형 기준)
- (국가유공자) 참전수당·무공수당을 대폭 인상*(월 +8만원)하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생활지원금(335천원~468천원) 신규 지원
 - * 참전수당: 월 22→30만원, 무공수당: 월 28~30→36~38만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지원 : 70% 이하 335천원, 50% 이하 468천원 지원

□ 주거·의료·돌봄 등 서민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주거)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및 청년맞춤형 지원* 강화, 주거급여 인상률 확대(기준임대료, 평균 4.8%)
 - * 청년세어하우스, 역세권 청년주택 등
- (의료)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4대 중증질환 → 전 질환)
 - *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 (돌봄) 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 상향(+5%p) 및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 확대(연 480→600시간)
 - 독거노인 돌봄(22.5→24만명)·장애인활동지원(65→69천명) 확대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양육부담 경감** 등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 (결혼·출산 여건 개선)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2만→3만호)
 -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16→18개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13→17개소) 등 **취약층 출산 지원 인프라 확충**
- (일·가정 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소득대체율 60%→8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인상**(첫째아 150→200만원)
- (양육부담 완화)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한부모가족 양육비**(월 12→13만원) 인상 및 대상(12→13세 이하) 확대
 -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 확충

□ **건보·의료급여 효율화** 등 복지지출 내실화 노력도 병행 추진

- (일을 통한 복지) 일하는 청년수급자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하여, **근로의욕** 제고 및 **탈수급** 촉진
 - * (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 지원 30만원 → (3년) 1,500만원 수준
- (건보·의료급여 효율화) 보장성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과잉 진료 방지***, **의료시스템 개선****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추진
 - * 사무장 병원 단속,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등, ** 완화의료 활성화 등
- (사례관리 체계 개선) 업무분야·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사례관리**(총 7종*)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 통합, 중독자, 자활, 아동, 독거노인, 의료급여, 방문건강 사례관리 등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104,904	113,165	·의료급여 +0.5조원, 주거급여 +0.2조원
▪ 취약계층지원	26,082	28,204	·장애인활동지원 +0.1조원
▪ 공적연금	449,930	478,005	·국민연금 +1.7조원
▪ 보육·가족·여성	59,225	70,207	·아동수당(신규) +1.1조원
▪ 노인·청소년	98,013	120,133	·기초연금 +1.7조원, 치매관리체계구축 +0.1조원
▪ 노동	182,653	237,652	·일자리아정자금 +3.0조원
▪ 보훈	49,754	55,129	·참전명예수당 및 보상금 +0.3조원
▪ 주택	212,421	238,670	·공적임대 17만호 +2.5조원
▪ 사회복지일반	8,290	11,207	·사회복무요원 병월급 인상 +0.05조원
▪ 보건	103,558	109,270	·건보가입자지원 +0.4조원
합 계	1,294,830	1,461,643	

<참고> 일자리 분야

- ◇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삶의 질 개선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 맞춤형 일자리지원·직업훈련·고용서비스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청년지원 패키지) 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지원(48→2,430억),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대**(0.95→1.25만개)로 입직 촉진
 - * 3명 신규채용시 1명 임금지원(연 2천, 3년간) : '17추경3천→'18안 2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으로 구직활동 애로해소,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
 - * 지원인원(5.5만 → 6만명), 2년 만기 적립금(1,200→1,600만원) 등
- (창업지원) 우수한 **민관창업자 발굴·육성**(TIPS, 150→326억원), **사내창업 프로그램**(신규, 100억), 장년인재서포터즈(15→29억) 등
- (공무원 증원) 5년간 17.4만명 증원을 위해, '18년도에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심 중앙직 공무원 1.5만명 증원

□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확대 지속유지**(10.1→10.6만명), 직장어린이집 확충(135개소)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 (중장년) 60세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장('17일몰→'20년까지) 및 단기인상(18→24만원), 신중년 폴리텍 특성화 캠퍼스 지정·운영('18안, 7개학과)
- (장애인) 장애인고용장려금(중증남성 월40→50만원), 근로지원인(1,000→1,200명), 보조공학기기 확대(+1,000점) 등 근로환경 개선

□ 직업훈련 질적 효율화·고용서비스 활성화

- (신기술·고속련 훈련)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확대 위해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과정 확대('17. 100 → '18안, 154억원)
- (사각지대 해소) 부처간 훈련사업 통·폐합 後 훈련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원('18년 신규, 19억원)
- (고용서비스) 대학일자리센터 확충(70→100개),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18하반기)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실업 불안 완화

- (구직급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5.3 → 6.2조원)
 - * 최저임금 인상(6,470→7,530, 16.4%)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 반영
- (사회보험 지원) 저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의 고용·국민연금 가입지원 확대*, 실업시 국민연금 납부 지원(실업크레딧 357→408억)
 - * 두루누리 사업(155→205만명, 5,202→7,021억원)
-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 한시로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10%) 및 수수료(50%) 지원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직접일자리	27,069	31,806	노인일자리 확대 44→51만명(+7만명)
▪ 직업훈련	22,458	20,921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일반고득화) 2→4천명
▪ 고용서비스	8,001	9,631	취업성공패키지 구축촉진수당(3개월, 월30만)
▪ 고용장려금	31,752	36,895	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장려금(신규2만명)
▪ 창업지원	22,004	24,664	창업기업자금융자 확대(1.5→1.7조)
▪ 실업소득 유지·지원	59,453	67,998	구직급여(5.3→ 6.2조)
합 계	170,736	191,915	12.4%

◇ 교육이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확대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

1.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소득격차 완화와 취약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도록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초·중·등) 교육급여 대폭 확대 및 소외계층 영재 맞춤형 지원
 - 교육급여를 '17년 대비 (초) 181.6%, (중·고) 70.0%로 대폭 상향
 - * '18년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설(연간 5만원)
 - 경제적 이유로 영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소외계층 영재대상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신설('18년안 510명)
 - (대학) 등록금 부담경감, 저소득층 대상 해외연수 지원 확대
 - (예비대학생) 저소득층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드림장학금) 확대
 - * 신규 선발인원 : ('17) 20명 → ('18) 50명, 지원단가 : ('17) 5만불 → ('18) 6만불
 - (대학생)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파란사다리) 신설(신규, 800명)
 - (대학원)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신규선발 확대('17년 10 → '18년 20명)
 - (평생) 취약계층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 * 평생학습에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연간 1만명 대상 46만원 지원

2. 부문별 배분방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및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교부금을 대폭 확충(42.9 → 49.6조원*, 15.4%)하고, 안정적 유아 교육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 전액 국고지원
 - * 교부금 규모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 제외

□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사업 확대

- 예비 교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26억원, 신규)하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 확대(800→1,200명)

□ (지방대학 육성) 지방 국립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국립대학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210 → 1,000억)
- 혁신도시-지역대학-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통한 지역우수인재 공동 양성

□ (대학창업 활성화) 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대학 내 구성원 대상 대학창업펀드 확대 및 부처간 융합예산으로 대학원특화형 및 과학기술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

□ (평생교육 체제개편)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설

- 구직자·재직자가 단기에 기업이 원하는 필수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산업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Nano-Degree) 개설

* 나노디그리 운영 : ('18 신규) 26억원, 8개 교육과정 개설 예정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유아·초중등교육	471,494	537,3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42.9→49.6조원)
▪ 고등교육	94,584	96,160	· 거점 국립대 등 지방대 육성(1,000억) · 대학생 창업펀드 조성 지원(150억) · 국가장학금 확대(3.99조)
▪ 평생·직업교육	6,935	6,673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신규, 1만명) · 나노디그리 운영(신규, 8개 과정)
▪ 교육 일반	1,110	1,269	· 인건비(623→660), 기본경비(268→275)
합 계	574,123	641,428	11.7% 증가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과 문화예술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융복합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통해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문화예술 창작 관련예산을 신규 지원*(+63억원)하고, 노후공연장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공간 확충하여 안정적 예술창작 여건 조성
 - i) 우수작가 창작지원 +10억원, 문예지발간지원 +10억원, 공연장대관료지원 +33억원, 민간소극장 특성화사업 +10.5억원
 - ii) 국립극장 리모델링 43억원→196억원, 국립한국문학관(新, +10억원), 서계동복합문화시설(新, +2억원), 당인리 문학창작발전소(新, +9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 1만원 인상(6만원→7만원),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예술인 복지환경 개선으로 예술인의 창작권 강화

- 예술인이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창작준비금(4,000→4,500명)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 지원(新, 15억원)

□ 문화 콘텐츠 분야는 장르별 직접 지원을 축소*('18년, △123억)하고, 투융자, 유통 플랫폼 등 간접지원 활성화

* 게임산업 △46억, 대중문화콘텐츠산업 △34억, 영상콘텐츠산업 △28억 등

- 영세 콘텐츠기업 지원 위해 이차보전 신규 도입 등 투융자를 확대ⁱ⁾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 유통플랫폼 확보ⁱⁱ⁾도 지원 강화

- i) 펀드출자(+50억), 완성보증(+50억), 이차보전 +20억(융자환산시 1,000억)
- ii)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7년 200 → '18년안 222(억원(+10.8%))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계층별 체육 향유 환경 조성

-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학교 등과 연계한 개방형 체육시설 지원 확대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17년 431 → '18년안 549억원(+27.3%)

-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확충
- *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 '17년 200 → '18년안 300억원(+50.1%)
-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 '17년 450 → '18년안 577명(+127명)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휴가지원 등 **관광인프라 지속적 확충**

- 근로자 휴가비 지원(신규 75억원)을 위한 **한국형 '체크 바캉스'** 도입을 통해 국내 여행 참여기회 확대 등 여행이 있는 삶 실현
- * 연간 1일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3위(2,113시간, '15 국제무역연구원)
- MICE·의료·크루즈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전략산업과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 '17년 188억원 → '18년안 251억원(+33.5%)
-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속 확대, **융합예산 등 종합적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억원)			
구 분(부문)	'17	'18안	비고 (주요사업)
문화예술부문	27,166	26,408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1,071→1,181)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출자(530→580)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63→133) 예술창작지원(311→33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51→275)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리모델링(43→196) *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 지원(신규, +500)
체육부문	15,021	11,576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431→549)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200→30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450→577명, +127)
관광부문	15,538	14,027	MICE산업육성(232→250) 의료 및 웰니스관광육성(61→71)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63→74)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265→344)
문화재일반	3,317	3,523	* 대부분 경직성 경비
문화재부문	7,891	7,746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189→269) 궁능방재시스템 구축(97→112) 문화유산 활용 진흥(261→273)
합 계	68,933	63,280	8.2% 감소

4 R&D 분야

-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융합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 ◇ 기술창업·중소기업 협업R&D 지원 확대로 신산업 일자리 적극 창출
- ◇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투자확대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융합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 (핵심기술)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 IoT, 빅데이터** 등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경쟁력 조기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적극 유도
- * AI, 빅데이터, 고성능컴퓨터 등 : ('17) 5,640 → ('18안) 6,518억원
- (융합기술) 개발된 기술을 융합하여 국방, 의료, 제조, 자율주행차 등의 **테스트베드*** 및 **공용플랫폼** 구축
- *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정밀의료 암진단 치료법 임상시험 등
- * 국방, 의료, 제조 등 : ('17) 5,035 → ('18안) 6,869억원
-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해 **SW교육**을 강화하고, **지능형반도체, 스마트 설계·운영 전문인력 양성 확대**
- * SW중심대학 : ('17) 20개, 332억원 → ('18안) 25개, 450억원
-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17) 14개 과정, 79억원 → ('18안) 17개 과정, 124억원

□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간 협업 R&D 지원**으로 일자리 적극 창출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기업에 대한 R&D지원**을 강화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 창업성장기술개발: ('17) 1,951 → ('18안) 2,707억원
- 대학 내 구성원이 우수한 과학기술만 보유시에도 창업할 수 있도록 **R&D 지원**(중기부, 교육부 등 다부처 연계지원)
- *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18안) 16억원
- 중소기업 간 **협업 R&D 지원 확대**로 개별 기업 보유기술의 공동 활용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리스크 분산과 개발비용 절감
- * 중소기업네트워크형R&D: ('17) 72 → ('18안) 147억원

□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 확대 및 청년과학자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진흥을 위해 **상향식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 확대

* 개인기초·집단연구 : ('17) 1.3 → ('18안) 1.5조원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청년 과학자의 취업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 연수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 ('17) 40 → ('18안) 104억원

** 이공계전문기술 연수 : ('17) 113 → ('18안) 126억원

□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감형 R&D 투자 강화**

-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 조기진단, 치료, 돌봄서비스 기술개발 등을 확대*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

* 치매대응R&D 분야: ('17) 190 → ('18안) 427억원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기술개발: ('18안) 33억원

-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및 **배출저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예방 등 감염병 대응 R&D**** 집중투자

*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17)120 → ('18안)159억원

** AI·구제역 대응 : ('17) 155 → ('18안) 290억원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기초·나노	23,368	24,032	· 나노·소재기술개발(480→492)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578→592)
▪ 에너지·환경	21,849	22,367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2,038→2,149)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220→251)
▪ 우주항공·생명 등	50,407	49,669	· 다목적실용위성개발(237→316) · 바이오·의료기술개발(2,626→2,719)
▪ 기계·제조·공정	14,330	13,690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735→772) ·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139→236)
▪ 전자·정보	25,951	26,033	·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신규 48) ·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169→179)
▪ 기타	58,709	60,548	· 문화기술연구개발(472→494) · IP-R&D전략지원(177→197)
합 계	194,615	196,338	0.9% 증가

- ◇ 크리에이티브 랩 등 창업인프라 확충 등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약계층 지원 확충
- ◇ 수출구조 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예산 확대

□ (창업)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성장단계별 창업·벤처 인프라 확충**

- (창업)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으로 설치·확대('18안 349억원)

- (성장)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신창업 플랫폼을 확대**하고 **R&D**지원으로 기술창업 활성화('17, 0.2조 → '18안, 0.3조원)

▪ **TIPS 프로그램 확대**('17 150개팀 → '18안 284개팀), **사내창업** 및 **분사(spin-off)**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18산규 100억원)

▪ **시니어의 기술·경험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세대융합형 창업지원**('17추경 112.5 → '18안 119억원)

- (재창업) 우수 재기기업인에 대한 **제도전 성공패키지 확대** ('17, 100→'18안, 150억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지원 확대**

*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 ('17) 244 → ('18안) 308억원

-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컨설팅**도 지원하는 **소상공인상생자금** 신설('18안 200억원)

-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18안 12.5억원) 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및 **특화·비생계형 업종 전환** 지원 강화

*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 국비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 ('17) 75 → ('18안) 85억원

재창업패키지(특화·비생계형업종 전환 지원) : ('17) 25 → ('18안) 30억원

□ (에너지)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 강화(1,660→4,360억원)
-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2,038→2,149억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를 추가(54→60만명), 단가 인상(9.5→10.2만원)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1.5→2백만원)

□ (수출) 품목 다변화, 진출시장 확대 등 수출구조 혁신 지원 및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여 수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

- 수출 첫걸음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하여 수출 저변 지속 확충(106→113억원)
- 소비재·서비스 업체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확대(88→93억), 인도, 아세안 등 6개 신흥시장 진출 지원(신규 18억) 등 수출 다변화 지원
- 수출바우처 적용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수출서비스 선택권 제고 및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활성화 추진(1,786 → 1,850억원)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산업진흥·고도화	89,671	86,953	·지역특화산업육성(131→416)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438→640)
▪ 무역 및 투자유치	5,864	6,0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167→2,388) ·수출바우처 사업(산업·중기·특허청) (1,786→1,850)
▪ 에너지 및 자원개발	32,896	33,322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000→2,0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660→2,360)
▪ 산업금융지원	11,864	12,886	·신성장기반자금(융자)(8,800→9,400) ·투융자복합금융(융자)(1,500→1,800)
▪ 산업기술지원	14,482	14,153	·크리에이티브 랩(신규 349) ·사내창업지원(신규 100)
▪ 산업·중소기업 일반	5,461	5,727	·인건비, 기본경비 등
합 계	160,238	159,106	△0.7% 감소

◇ SOC분야 지속적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를 위해 신규 건설사업 최소화, 연차소요 재점검

◇ 주요 교통시설의 공공성 강화

◇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안전 및 재해예방,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

□ 그간 축적된 SOC 스톡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

*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G20대비) : 고속도로 1위, 국도 2위, 철도 6위

- 신규 건설 대신 기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과잉 설계를 지양

□ 계속사업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와 연차별 소요 재점검

- '18년에 완공되는 교통인프라의 준공소요는 빠짐없이 반영

□ 고속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공공성 강화

-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도로공사 건설·운영)으로 전환하여 조기 완공, 통행료 인하 및 명절무료화 등 추진

* 민자사업 추진시 예상되던 도공 통행료 수입 손실을 완화하여 명절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출퇴근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

* 수도권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 ('17년) 552 → ('18안) 760억원

□ 재해 예방 및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 **항만시설 및 댐 안전성** 보강으로 태풍,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 태풍피해복구(신규 249억원), 재해안전항만 : ('17) 341 → ('18) 874억원
댐 안전성 강화(신규 50억원),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신규 9억원)
- **특수교, 전차선로에 피뢰·소화시설**을 설치하여 **낙뢰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
 - * 특수교 안전대책(신규, 90억원), 고속철도 낙뢰 방지 : ('17년) 5 → ('18년) 120억원
-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신규, 171억원)
 - * (기존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원, (신규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자율주행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유플랫폼** 구축
 - * 첨단도로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실시(2개소, 100억원)
 -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데이터 공유 지원(신규, 10억원)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추가 조성(2개소, 40억원)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도로	74,089	54,424	· 국도 건설(2.7 → 1.8조)
○ 철도, 도시철도	71,437	47,143	· 일반철도 건설(4.4 → 2.0조)
○ 해운·항만	17,607	17,021	· 항만개발 및 관리(1.5 → 1.3조)
○ 수자원	18,108	16,762	·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1.6 → 1.5조)
○ 지역 및 도시	12,028	15,536	· 도시정책(0.2 → 0.5조)
○ 물류, 항공, 산단	28,086	26,272	· 산업단지(0.5 → 0.3조)
합 계	221,354	177,159	△20.0% 감소

- ◇ 쌀 중심 양적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질적 투자**로 전환
- ◇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살기좋은 농촌공간 조성**
- ◇ **AI 등 가축질병예방** 및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 농어업·농어촌 ICT융복합 확산, 현장지원 강화 등 스마트팜 확산 지원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스마트 농어업**)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및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조성 지속 추진 등 **4차산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
 - *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신규 11), 스마트원에단지기반조성(105)
첨단친환경 양식 시스템 : ('17) 23개 → ('18) 25개
- (**스마트 축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축사(269 → 498억원) 지원 확대

□ 청년 농어업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대

- (**창업지원**) 청년 농어업인 **영농·영어 정착*** 및 귀농인·젊은 창농인에게 **맞춤형 농지임대** 등 창업 지원 강화
 - * 진입단계 청년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자금 지원 시범사업 실시(신규 97억원)
- (**농업법인 창취업**) **청년층의 농업법인 창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과 농업법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턴제 지원**('18년 신규)
- (**벤처농업**) 농식품 벤처의 최대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 제품 홍보관**' 증설(1→2개소) 및 **창업보육** 확대(60→100개)
- (**6차산업**) 농업의 **6차산업 지구조성 확대**(신규 4지구) 및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확산**(25→35개) **어촌특화지원센터 확대**(총10개소)

□ 쌀 수급안정 및 농어가 소득안전망, 농촌복지 확충

- (쌀수급안정) 한시적('18~'19)으로 논 타작물 전환을 지원(신규, 1,368억원) 하고, 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 창출(5만톤, 460억원)
* 논 타작물 전환 소득지원 : 평균 340만원/ha(국비 80%)
- (소득·경영안정) 한·중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위험 관리
* (밭고정) 45만원/ha→50, (조건불리) 농지 55→60 / 수산 55→60(전도서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53품목 → 57,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신규 17억원)
- (농촌형 복지확충)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하고,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
* 농촌형 교통모델(신규 41억원, 전국 82개 시군), 건강·연금보험료 (3,444→3,472억원), 농지연금(663→923)

□ 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재해·재난 예방

- (상시방역체계) 가금농장 방역인프라(CCTV 등) 설치(2,570개소) 및 공동방제단 확대(450→540개반) 등 농가·지자체 중심 자율·책임방역 강화
- (가금산업구조개편)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위험 밀집지역 축산농가 이전·재편 지원
- (가뭄대책) 경기 남부·충남 서북부 수계 연결, 전남 서해안 예방 등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140억원) 및 아산-삼교-대호호(160억원) 수계연결

(억원)

구 분	'17	'18안	비 고
· 농업·농촌	147,062	147,848	· 논타작물재배지원(+1,368),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91)
· 수산·어촌	21,208	21,228	· 어업지도관리(+133), 수산물해외시장개척(+15)
· 임업·산촌	20,499	20,622	· 산림서비스도우미(+156), 산림재해일자리(+179)
· 식품업	7,451	6,714	· 수출인프라강화(+44),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519)
합 계	196,221	196,418	

- ◇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환경위해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 하수도 정비사업 내실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 확대

□ (대기)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 수송 오염원 저감 실효성 제고, 환경 취약계층 및 생활 주변 환경 개선 지원 확대

-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6→12만대), 건설기계·대형 화물차 저감장치 부착(324→6,395대) 등 지원
- 전기차(1.4→2만대), 전기이륜차(0.13→0.5만대) 보급 지원 확대 및 전기 급속충전기(530→1,070기) 확충
- 노후 경유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추경 800→1,800대), 도로 청소차 보급(111→137대), CNG버스 교체 지원(700→2,064대) 등 확대
- 대기오염 국가측정망 확충(2→13개), 종합대기측정소(1개)·집중측정소(2개) 신규 운영 등 예보 정확도 제고

□ (환경보건) 살생물제 관리 등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강화

-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신규 정부출연(예비비 100억원) 및 피해자 보건센터 지정 확대(1→4개소)
* 서울 아산병원 외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1개소씩 추가 지정 예정
-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시행기반 구축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당초 '22→'19년, 2개소 구축)
* 살생물제 시행 기반마련(81억원), 만성흡입독성 장비도입(45억원), 시설증축비(33억원) 등
- 전국 난개발지역 현황조사를 토대로 우선순위 도출 후 시범사업 등 환경보건평가 단계적 확대(신규 5억원)

□ (해양환경)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태세 구축

- 방제작업정 배치(6억원, 신규), 방제단정 교체(3척, 96백만원) 등 지원

□ (자연) 나고야의정서 발효대비 국가 생물자원 경쟁력 확보 및 AI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철새모니터링 사업(신규 11억원) 반영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6억원) 및 야생생물 유전자원 소재 연구동 건립(10억) 신규 반영

□ (환경산업)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환경산업 지원 확대

-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환경전문무역상사 설립 지원(신규 15억원), 미래환경산업펀드(150억원)

□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순환 확대

- 순환자원 인정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신규 제도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원순환 촉진 지원(신규 32억원)

□ (상하수도) 최소 Stock 확보(90%이상)로 노후 환경기초 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 등 질적 구조조정 추진

- (하수도) 수질개선 투자는 축소(1.9→1.7억원,△11%)했으나, 노후 하수도 교체·보수 및 물 재이용 투자(321 → 402억원)는 확대

- * 하수관로 개량 투자 비중: ('16) 25.8%→('17) 31.9%→('18안) 34.4%

- (상수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누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 확대(512→1,075억원)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상하수도·수질	41,679	38,972	· 하수처리수 재이용 +104, 노후 상수도 정비 +563
· 대기	5,798	7,570	· 전기자동차 보급 +440, 조기폐차 +452
· 환경 일반	9,751	9,725	· 보건센터 확충 +30, 난개발 지역 현황 조사 +5
· 자연·해양환경	8,439	8,399	· 유전자원정보센터 +6, 야생생물자원관 건립 +10
· 폐기물	3,492	3,106	· 자원순환촉진지원 +32
합 계	69,160	67,763	△2.0% 감소

◇ '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반영

◇ 북핵·미사일 위협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 장병 생활여건 및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분야 재정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

- (국방비 규모)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 규모를 참여정부 이후 최고수준으로 확대

- 국방비 증가율*은 6.9%로, '09년 이후 최고 수준

- * 국방예산증가율(%) : 참여정부 (8.9), MB 정부 (5.2), 박근혜 정부 (4.1)

- (전력증강 투자확대) 확대된 국방비로 방위력개선 집중투자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0.5%로 '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1.3%로 '02년 이후 최고 수준

-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참여정부 (13.0) MB 정부 (5.7), 박근혜 정부 (4.8)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를 적극 확대

- (미사일방어)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 적극 지원(21,359→22,565억원)

- *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대량 응징·보복

- (첨단전력)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 인수, 이지스 함 구축 지원(광개토Ⅲ-Batch-II)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 (국지도발 억제) 무인기 대비 방공전력* 강화,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II 및 230mm급 다련장 등 확충

- * 무인기 탐지·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구축(신규)

□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생활여건 및 병영문화 개선**

- (장병복지 향상) 병 봉급과 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원 증원 등
 - 병 봉급 인상(병장기준 '17년 21.6 → '18년 40.6만원) 및 軍부사관 4천명 증원(17년 2,605명 → '18년 3,948명)
 - 영내자 급식비 단가 5% 인상(7,481→7,855원) 및 민간조리원 증원(1,841→1,903명) 으로 군부대 급식 질 개선
- (병영문화 개선) 軍 복무적응 지원 및 자기계발기회 확대 등
 -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23→44명),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17년 858 → '18년 '989개소, '18년 완료), 장병 선호에 따른 자기계발비용 지원('18년 10개부대 시범실시)
-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10,000 →15,000원) 및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 세탁실 설치확대로 예비군 훈련시설 개선

□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적정 군수 지원으로 대비태세 강화

- (대테러 역량강화)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 보강(3→174억원)
- (군수)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장비유지 중심으로 투자하되, 일반 물자구입 축소, 소요예측 정교화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 병행
 - * 정비예산 : 28,164 → 30,269억원 ** 물자구입 : 2,706 → 2,310억원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병력운영	171,464	184,142	· 병 봉급 인상(10,472→18,140) · 영내자 급식비 5% 인상(11,983→12,032)
▪ 전력유지	109,913	112,210	· 군수지원 및 협력(46,806 → 49,248) · 군사시설 건설·운영(27,774 → 27,913)
▪ 방위력 개선	121,970	134,826	· 3축체계(21,359→22,565) · 차세대전투기(F-35A) (9,871 → 13,024)
합 계	403,347	431,177	6.9% 증가

- ◇ 국민소통외교를 실현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 ◇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 준비 지속 추진

□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소통과 재외국민 안전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대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센터 설립
 - * 국민외교추진 기반 구축 (15억원)
- 테러·자연재난·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투자 확대
 - *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 (1억원) / 재외국민보호 (104→111억원)

□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및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

- 국제개발협력에 청년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백신 보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참여 확대 → 국익에 기여
 - * 혁신적 청년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KOICA CTS사업: 73 → 86억원
 - * KOICA 기업참여사업(IFS) (91→98억원) /글로벌헬스연구기금 신설(50억원)
-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교육과정 신설 및 수준별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재양성 경력사다리 마련
 - * 청년국제기구진출사업 (43명→63명) /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12명)
 - * 개발협력 인재양성을 위하여 단계별 교육과정 신설(20개)

□ 남북 경제 교류협력 지속 추진 및 인도적 지원 확대

-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으로 뒷받침
 - * 동해권(에너지, 광물), 서해권(철도 등 물류), DMZ권(관광) 중심 발전 계획
 - * 경험기반(무상) 세부사업: ('17) 1,389억 → ('18현반영) 2,480억원
-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산 확충(과거 최대 수준인 年3회 반영)
- 주거지원금 인상(13→16백만원), 지역적응센터 확대(23 → 25개소) 등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외교 부문	33,305	34,962	· ODA* (27,458→29,595)
▪ 통일 부문	12,355	13,092	· 남북협력기금(9,627→10,462)
합 계	45,660	48,054	5.2% 증가

* 외교부문 ODA는 22,174 → 23,674억원

-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법사행정' 구현
 ◇ 치안 및 재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호 강화

-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지원 확대(29억원), **논스톱국선 변호인제도*** 전면 시행(27억원) 및 **개인 회생·파산 지원**** 강화

* 구속수사단계에서 1심 재판까지 동일 국선변호인 전담으로 법률 조력 실질화
 ** 개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변호사 및 소송 비용 지원(14억원) 등

-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취업연계 직업훈련·교도작업**을 강화(660억원)하고, **출소후 취업지원**을 확대(5→5.5천명)

□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 강화

- 범죄 및 국민안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해경인력 증원(+4,887명) 및 장비 확충

*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4대), 사이버 수사 장비 확충(13→39억원), 외국어선 불법어로 단속 함정 증강(408→524억원), 중앙119특수구조대 장비 등 확충(523억원)

- 범죄분석 시스템 도입* 및 주민협력을 통해 **선제적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

* '주민요청 + 112신고 분석'을 통해, 최적 순찰경로를 도출(신규, 8억원)
 ** 여성안심거리조성(4억원,신규),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지원(4억원,신규)

-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위험지역의 예방투자 확대**

* 재해위험지역 정비(3,586→3,734억원)

(억원)			
구 분(부문)	'17	'18안	비고 (주요사업)
· 법무 및 검찰	34,206	36,402	국가배상금(1,000억원), 형사보상(275억원)
· 경 찰	104,790	107,967	사이버안전수사활동(39억원)
· 법원 및 헌재	19,058	19,590	국선변호료 지원(595억원) 등
· 해 경	12,072	12,702	함정 건조 (524억원) 등
· 재난관리	11,272	12,306	재해위험지역정비(3,734억원) 등
합 계	181,398	188,967	4.2% 증가

- ◇ 지방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 **민관협력** 및 **민간 주도의 사회적 문제해결** 확산 추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차질 없는** 준비 지원

-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5.2조원 증액** 지원하여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 내국세가 대폭 증가하여 지방교부세는 '**17년 대비 5.2조원 증가**(40.7 → 46.0조원)

-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반 조성**

- 국민이 직접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기획형 5개, 공모형 20개), 오프라인 플랫폼(3개) 등 확산 추진

* 국민참여프로젝트,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 ('17) 46억원 → ('18) 284억원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혁신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역특성·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적극 추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및 투·개표 사무 등 차질없이 지원

-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후보자의 정책선거 정착** 등을 위해 차질 없이 뒷받침

* 지방선거관리비 : ('14) 224 → ('18) 211억원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하도록 지원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업(신규, 23억원)

(억원)			
구 분	'17	'18안	비고
·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 제외시)	415,389 (8,076)	467,426 (7,649)	· 지방교부세(407,314→459,777)
· 재정·금융	171,787	183,561	· 국고채이자상환 (118,270→126,926)
· 일반행정 등	46,202	45,477	· 사회혁신(878→1,547)
합 계	633,379	696,464	10.0% 증가